

일제강점기 정치·경제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배 석 만

(東京大學 외국인연구원)

目次

I. 머리말

II. 연구현황

1. 정치사 분야

2. 경제사 분야

III. 과제와 전망

IV. 맺음말

I. 머리말

기존의 부산관련 연구성과에 대한 회고와 전망은 주로 ‘지역사’ 내지 ‘지역학’으로서의 ‘釜山史’라는 관점에서 통사적으로 이루어졌다.¹⁾ 반면 이 글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정치·경제사’라는 짧은 기간의 한정된 주제에 대한 연구사정리이다. 이 글의 목적과 비슷한 시도로는 김대래·장지용이 경제사의 연구현황을 정리한 바가 있다²⁾. 그러나 김대래·장지용의 연구는 개항 후 현재까지의 근현대경제사를 개략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연구사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부산지역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부산시사편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1989년부터 1991년에 걸친 『釜山市史』 전 4권의 간

-
- 1) 洪淵津, 「釜山の 地方史 研究現況」 『港都釜山』 8,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1; 洪淵津, 「釜山史 研究現況」 『港都釜山』 1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3; 강대민·박선애, 「부산사 연구기관과 연구현황」 『문화전통논집』 2,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94; 김광철 외,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회보』 창간호, 1994; 김석준, 「부산학의 현황과 과제」 『韓國民族文化』 1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0; 강대민, 「부산사 연구현황과 과제」 『부산광역시 2001 분과별 활동보고서: 부산학분과』 2001.11; 김대래, 「지역학 연구의 동향과 부산학의 과제」 『부산광역시 2001 분과별 활동보고서: 부산학분과』 2001.11; 김석준, 『전환기 부산 사회와 부산학』, 부산대학교출판부, 2005.
 - 2) 김대래·장지용, 「부산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부산학연구』 창간호,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3.

행과 1991년 논문집 『港都釜山』의 복간은 지역사로서 부산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향토사 복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개인연구에 의존하던 부산의 역사가 전문화, 체계화, 구체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4년 부산경남역사연구소(현 부경역사연구소)의 출범과 논문집 『지역과역사』의 발행, 2001년 부산·경남의사학회가 통합한 부산경남사학회의 출범과 논문집 『역사와경계』의 연 4회 발간 등은 부산지역 역사에 대한 연구수준을 보다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부산지역사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같은 시기에 시작된 ‘지역학’ 내지 ‘지방학’으로서의 ‘부산학’의 정립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³⁾ 부산학은 기존의 역사·문화 중심의 지역연구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정체성 구축과 미래의 발전전략 수립까지를 포함하는 학제적 연구나 총체적 분석틀 속에서의 ‘지방학’을 추구하였다. 1988년 ‘지역사회연구회’의 설립, 1990년대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학 시리즈’의 발간⁴⁾, 2002년 신라대학교 ‘부산학 연구센터’ 개설 등은 부산학 정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었다. 또한 ‘부산학’ 정립의 기초 작업으로 부산관련 문헌 및 연구성과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졌다.⁵⁾ 부산

3) ‘부산학’ ‘인천학’과 같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영어로 ‘Local Studies’인 이 학문의 명칭은 국내에서는 주로 ‘지역학’ 내지 ‘지방학’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지만, ‘지방학’은 ‘중양’에 대한 차별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의견이 있고, ‘지역학’ 역시 ‘글로벌’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국제지역을 연구하는 ‘지역학(Area Studies)’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학 시리즈로 발간한 책은 『부산도시론』(1993), 『부산경제론』(1994), 『부산사회문화의 이해』(1997), 『부산도시론』(2000) 등이다.

학과 같은 지역학 내지 지방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위치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부산학’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활발하게 지속되었고, ‘부산사’는 부산지역의 정체성 구축과 관련하여 ‘부산학’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졌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축적된 부산사 연구 중에서도, 통사적으로 쓰여진 기존의 연구사 정리작업을 토대로 하면서 일제강점기 정치·경제사 관련 연구성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우선 기존 연구성과를 정치사와 경제사 영역으로 대별하고, 각 영역을 다시 주제별로 묶어서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현황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 및 전망에 대한 필자 나름의 견해를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II. 연구현황

1. 정치사분야

식민지 역사에서 정치사란 식민지 지배와 이에 대한 저항

5) 최초의 작업은 동남은행이 1994년 출판한 『부산권 연구문헌 목록집』으로 해방 후 1993년까지 부산관련 각종 간행물과 연구논문 4,138건을 정리 수록하였다. 2001년에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부산시와 함께 역사자료를 비롯하여 2000년 초반까지의 부산관련 자료, 문헌, 연구논문 등을 망라한 7,116건을 목록화하여 『부산학 연구문헌 목록집』을 출판하였다.

의 역사를 의미한다. 전자가 식민지 통치구조에 주목하여, 일제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고 교묘하게 우리 민족을 통제·억압하였는가를 밝히는데 집중하였다면, 후자는 이러한 억압적 식민 지배에 대한 조선민중의 저항, 즉 항일운동사로 귀결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을 보면 항일운동사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식민 지배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별도로 정리되는 항일운동사를 제외한 일제의 식민 지배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정리한다.

식민 지배의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부산과 관련한 연구는 부산의 행정, 사법, 치안조직의 전체적인 구조를 복원한 『釜山市史』와 김용욱의 연구가 있다.⁶⁾ 이들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행정, 사법, 치안의 작동시스템이 대체적으로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이외에는 식민 지배사와 관련한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 홍순권은 새로운 각도에서 식민통치 구조에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그의 연구가 지배와 저항의 협간에 존재하는 朝鮮내 일본인 사회를 시야에 넣은 것이다. 그는 일제의 통치대상으로 朝鮮에 살았던 일본인 사회를 추가하였다. 식민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본국의 일본인들에 비해 일정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在朝 일본인사회에 대해 일제가 이러한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식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갔는가를 특수행정구역인 ‘府’에

6) 김용욱, 「日帝强占期 釜山の 行政組織과 日帝의 統治構造」 『港都釜山』 1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8.

실시된 ‘府制’를 중심으로 제도의 변화추이를 통해 파악하려고 하였다.⁷⁾ 그리고 1910년대 부산부협의회 협의원 임명과 1920년대 부산부협의회 협의원 선거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일제강점기 지방정치와 지역사회의 상관관계, 식민지적 특수성으로서의 조선인 협의원과 일본인 협의원의 상호관계 등을 분석하였다.⁸⁾

한편 최근에는 일본 연구자에 의한 연구성과도 제출되었다. 사카모토 유이치(坂本悠一)는 부산부의 公報誌였던 『釜山』의 1927~1930년분의 기사를 분석하여 1920년대 후반 부산부의 행정 동향을 검토하였다.⁹⁾ 그는 이 당시 부산 행정의 특색으로 각종 사회사업정책의 강화가 이루어졌음에 주목하고 그 배경으로 1920년대 조선총독부 문화통치에 기반한 사회사업시책이 지방행정에 반영된 점, 농촌과잉인구의 유입에 따른 도시빈곤층 형성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2. 경제사분야

일제강점기 부산을 대상으로한 정치사 연구가 식민지 지배사의 관점에서 일제의 지방통치 구조를 밝히는 차원에서 몇몇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경제사 연구는 다양한 영역

7) 홍순권, 「일제시기 ‘부제’의 실시와 지방제도 개정의 추이-부산부 일본 인민회의 자치제 실시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역사』 14, 부경역사연구소, 2004.

8) 홍순권, 「1910~20년대 「부산부협의회」의 구성과 지방정치-협의원의 임명과 선거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60, 부산경남사학회, 2006.

9) 坂本悠一, 「1920年代後半における釜山府政」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桜井書店, 2007.

과 주제에 걸쳐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고, 주제에 따라서는 일정한 대립구도도 발생하였다.

우선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경제사의 흐름에 대한 전체적 개관은 부산지역 공공 기관이 주도한 공동연구의 형태로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를 들어보면 『開港百年-釜山史의 再照明』(부산일보사, 1976), 『釜山市史』, 『釜山經濟史』(부산상공회의소, 1989)가 있다. 특히 『釜山經濟史』는 1차 자료를 풍부하게 구사하여 일제강점기 부산경제의 흐름을 밀도 있게 복원해 내었다. 이 책에 개제된 데이터들은 이후 일제강점기 부산 경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개인 연구자에 의해서도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경제사의 전체적 흐름을 정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업, 수산업, 공업,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부산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설적으로 정리한 김인태의 연구¹⁰⁾를 제외하면 주로 ‘공업화’에 주목하였다. 선구적인 논문으로는 김의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개항이후 1960년대까지 부산지역의 공업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분석함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¹¹⁾ 박영구는 일제강점기 공업화 과정을 통계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다.¹²⁾ 특히 관련 통계 데이터를

10) 김인태, 「日帝强占期 釜山の 經濟構造-製造業과 水産業을 中心으로」 『港都釜山』 1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8.

11) 金義煥, 「부산 근대공업 발달사(上)(下)」 『港都釜山』 6, 부산 시사편찬위원회, 1967; 『釜山近代工業發達史 研究』, 1969; 「釜山 근대공업 발달사 관계 사료해설」 『港都釜山』 6,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7.

12) 박영구, 『근대 부산의 제조업 1900~1944:통계와 발전(부산의 제조업, 1900~2000(I))』,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5.

꼼꼼하게 수집하여 근대 100년간의 장기통계를 작성한 것은 앞으로의 연구의 활성화에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¹³⁾ 장기 통계의 작성과 분석을 통해 근대 부산의 역사상을 복원해보려는 시도는 한국 근대 장기통계 작성을 시도하는 중앙학계의 동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활발한 추세이다.¹⁴⁾ 최근에는 역사연구의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부산과 동래의 일제강점기 인구의 장기통계 추이를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도 나왔다.¹⁵⁾

한편 부산지역의 공업화 과정을 식민도시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경남은 일제에 의한 식민도시의 형성과 공업화가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부산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업화, 도시화의 과정이 근대로의 성장과 발전의 과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인이 중심을 이루고 조선인이 소외되는 과정이기도 했음을 명확히 하였다.¹⁶⁾ 장선화 역시 부산지역의 공업화과정과 그에 따른 도시의 변화과정을 근대성과 식민성의 양면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 부산의 공업화과정을

13) 그는 해방 후부터 2000년까지의 장기통계와 공업화 과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여 20세기 부산지역 공업화의 전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장기통계를 정리하였다(박영구, 『현대 부산의 제조업 1945~2000:통계와 발전(부산의 제조업, 1900~2000(II))』,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5).

14) 김호범 외, 『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경제의 변동분석』, 부산광역시, 2004; 중앙학계의 장기통계 작업의 결과물로는 안병직편, 『한국경제성장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1)와 김낙년편, 『한국의 경제성장1910~1945』(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등을 들 수 있다.

15)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韓國民族文化』 26,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6) 김경남, 「한말, 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징」 『지역과역사』 5,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

상업중심도시에서 상공업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근대성과 조선인의 소외라는 식민성이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¹⁷⁾

주제별 연구로 들어가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던 영역은 ‘자본가연구’와 ‘기업경영사’ 내지 ‘산업사연구’이다. 우선 자본가연구에서는 민족자본에 일찍부터 주목하였다. 민족자본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일본인 중심의 식민지경제에 저항하는 능동적, 민족운동사적 관점과, 이보다는 수동적이지만 최소한 일본인 자본에 포섭 또는 동화되지 않은 경제영역의 존재에서 출발하여 서서히 포섭되어 간다고 평가하는 관점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성과가 白山 安熙濟에 관한 일련의 연구이다. 안희제는 자본가로서의 경제활동은 물론 독립운동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족자본가의 상징적 사례가 되었다.¹⁸⁾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선인 자본가의 실질적 존재양상을 적극적인 민족운동에까지 참여하는 안희제와 같은 이미지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선인 자본가에 대한 풍부한 사례연구가 필요했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산지역에서 활동한 조선인 자본가의 경우도 구포은행을 설립한 윤상은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¹⁹⁾ 최근 오미일

17) 장선화, 「1920~30년대 부산의 공업발전과 도시구조의 변화」 『지역과역사』 6,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0.

18) 김의환, 「백산 안희제」 『한국언론인물지』, 한국신문연구소, 1981; 김준현, 「백산 안희제의 사적년보」 『민족문화논총』 5,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4; 「백산무역주식회사의 조직과 기능」 『한일경제논집』 1, 1984; 李東彦, 「白山 安熙濟 研究」 『한국독립운동연구』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강대민, 「白山 安熙濟의 大東靑年團運動」 『論文集』 18-2, 경성대학교, 1997.

19) 조기준, 「구포은행과 윤상은」 『韓國企業家史』, 박영사.

은 연구대상을 개인 자본가에서 자본가 계층으로 확대하여 저항과 동화의 협간에서 지속적으로 동요하며 다양한 행동패턴을 보였던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계층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²⁰⁾

조선인 자본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 상대역이자 일제 경제침탈의 침병이던 일본인 자본가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었다.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는 부산의 유력 자본가 중 한 명인 카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가 경남 진해의 李垞家 어장을 탈취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²¹⁾ 후지나가가 카시이의 초기 축적활동에 주목했다면, 김동철은 카시이의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친 자본축적 활동 및 축적한 부를 토대로 부산지역 유지로서 펼친 사회활동까지를 연구시야에 넣었다.²²⁾ 김동철은 이 외에 경부선 개통이 부산지역 일본인 상인들의 투자동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²³⁾

일본인 자본가의 존재양태에 대한 주목은 개개인의 분석에 머물지 않고, 이들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활동했던 부산 상공회의소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차철욱은 개항 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부산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 구성원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일본인이 주도하는 부산경제계의 실태와 변화과

20) 오미일,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港都釜山』 1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5.

21) 藤永壯, 「植民地期下日本人漁業資本家の存在形態-李垞家漁場をめぐる朝鮮人民との葛藤-」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 朝鮮史研究会, 1987.

22) 김동철, 「부산의 유력자본가 香椎源太郎의 자본축적과정과 사회활동」 『歷史學報』 186, 歷史學會, 2005.

23) 김동철, 「京釜線 개통 전후 부산지역 日本人 商人의 투자 동향」 『韓國民族文化』 28,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정 및 그 속에서의 조선인 자본가의 존재양상을 분석하였다.²⁴⁾ 기무라 겐지(木村健二)는 개항이후 1945년에 이르기까지 부산상공회의소의 변천을 조직과 활동 면에서 살펴보았다.²⁵⁾ 그는 또한 부산상공회의소의 활동업무 중 하나인 거래조회 업무를 분석하여 戰時期 부산경제의 전체적 동향을 분석하였다.²⁶⁾

‘기업경영사’ 내지 ‘산업사연구’는 1990년대부터 면방직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朝鮮에서 가장 발전했던 공업분야가 면방직이었고, 부산은 ‘朝鮮紡織(주)’의 소재지로 면방직공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김경남은 면방직 대기업의 성장과정을 조선방직을 포함한 대공장 경영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한편, 1930년대 이후 일제가 戰時統制體制를 구축하면서 군수산업 확충의 관점에서 면방직공업을 어떤 식으로 재편하는가를 민족적, 계급적 수탈이라는 이중수탈의 관점에서 밝혔다.²⁷⁾ 한편 정안기는 기업경영사적 측면에서 조선방직의 설립부터 戰時期 만주진출에 이르기까지의 자본축적 과정을 밀도 있게 분석하였다²⁸⁾. 김경남이 일제의 침략과 수탈이

24) 차철욱, 「개항기~1916년 부산 일본인상업회의소의 구성원 변화와 활동」 『지역과역사』 14, 부경역사연구소, 2004; 「일제강점기 부산상업[공]회의소 구성원의 변화와 ‘釜山商品見本市」 『지역과역사』 17, 부경역사연구소, 2005.

25) 木村健二, 「釜山への日本人の進出と經濟団体」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桜井書店, 2007.

26) 木村健二, 「戰時下釜山商工会議所の取引照會業務」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桜井書店, 2007.

27) 김경남, 「1920·30년대 면방대기업의 발전과 노동조건의 변화-4대 면방대기업을 중심으로」 『釜山史學』 25·26합집, 釜山史學會, 1994; 「1930·40년대 면방직공업 재편성의 본질」 『지역과역사』 2,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6.

28) 정안기, 「戰間期 朝鮮紡織의 事業經營과 金融構造」 『경제사학』 30,

라는 측면에서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정안기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여 자본축적을 해 나가는 기업의 움직임에 주목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중공업 분야인 造船工業에 대한 산업사적 접근도 시도되고 있다. 배석만은 1937년 영도에 설립된 朝鮮重工業(주)을 사례로 하여 戰時期 군수공업 확충의 실태를 일제의 造船정책과 이에 대한 민간기업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²⁹⁾.

일제가 건설한 부산항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운송·항만 관련 연구도 일제강점기 부산 경제사 연구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부두건설을 중심으로 한 항만 연구는 시가지 형성과 함께 별도로 회고와 전망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운송사의 측면에서 해운, 철도관련 연구사만을 정리한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관부연락선과 관련한 연구이다. 동 연구는 일본 쪽에서 시작되어 일찍부터 관련 자료의 정리³⁰⁾와 일제강점기 조선인 여객 수송의 추이가 분석되었다.³¹⁾ 2005년 관부연락선 개통 100주년을 계기로 부산지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에서의 관부연락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홍연진은 부산의 일본인 인구변동 추이를 관부연락선의 동향과 연

경제사학회, 2001; 「戰前「朝鮮紡織」と中外コンツェルン」 『經濟論叢別冊 調査と研究』 第24号, 京都大学, 2002; 「朝鮮紡織의 戰時經營과 資本蓄積의 전개」 『경제사학』 32, 경제사학회, 2002; 「戰時期 조선방직의 對滿洲投資와 營口紡織」 『역사와경계』 48, 부산경남사학회, 2003.

29) 배석만, 「朝鮮重工業株式會社 經營資料의 內容과 性格」 『港都釜山』 2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 「朝鮮重工業株式會社の 戰時經營과 해방 후 재편과정」 『역사와경계』 60, 부산경남사학회, 2006; 「日中戰爭期朝鮮重工業株式會社の設立と經營」 『朝鮮史研究会論文集』 44集, 朝鮮史研究会, 2006.

30) 日本国有鐵道広島鐵道管理局, 『関釜連絡船史』, 1979.

31) 金贊汀, 『関釜連絡船 海峡を渡った朝鮮人』, 朝日新聞社, 1988.

결하여 분석하였다.³²⁾ 류교열은 취향한 선박 순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그 수송량과 운항속도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³³⁾ 최영호는 해방직후 관부연락선이 조선인과 일본인의 귀환선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 밝혔다.³⁴⁾ 일본 연구자들도 같은 시점에서 새로운 연구를 선보였는데 사카모토 유이치(坂本悠一)는 일제 침략의 대동맥 역할을 한 조선철도의 군사수송의 역할과 그 속에서 부산이 가진 위치를 검토하였고³⁵⁾, 기무라 겐지(木村健二)는 일제강점기 관부연락선의 여객 및 화물의 수송실적 추이를 분석하였다.³⁶⁾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근현대 한국해운사 전반을 다룬 손태현의 연구에서 일제강점기 부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연안 및 근해 해운의 모습이 일정하게 복원되었다.³⁷⁾ 이후 해운업과 관련된 연구는 부진했으나 최근에 나온 두 편의 자료소개는 해운업 연구의 활성화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노기영은 일제의 패전 직전인 1945년 1월부터 7월까지 부산항을 중심으로 운송난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군의 물자수송 작전과 관련한 자료를 소개하여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해방

32) 홍연진, 「釜關連絡船 始末과 釜山府 일본인 인구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11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33) 류교열,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와 越境-釜關連絡船과 渡航證明書を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1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34) 최영호, 「일본의 패전과 釜關連絡船:釜關航路의 귀환자들」 『한일민족문제연구』 11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6.

35) 사카모토 유이치, 「植民地期 朝鮮鐵道에 있어서 軍事輸送」 『韓國民族文化』 28,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桜井書店, 2007에 부분수정 재수록).

36) 기무라 겐지, 「관부연락선이 운송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韓國民族文化』 28,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 桜井書店, 2007에 부분수정 재수록).

37) 孫兌鉉, 『韓國海運史』, 亞成出版社, 1982.

직전의 부산항을 기점으로 한 연안운송의 실태를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³⁸⁾ 배석만은 부산을 비롯하여 남해안 연안해운을 독점했던 朝鮮汽船(株)의 경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여 해운업에서의 기업경영사적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³⁹⁾

부산항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된 또 하나의 분야가 무역이다. 1960년대 초에 나온 박인석의 연구는 전근대 이래 일제말까지 부산의 무역동향을 역사적 관점에서 개괄하였고, 특히 일제강점기 무역은 4시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⁴⁰⁾ 박봉두는 일제강점기 부산의 유통과 무역의 전체적 흐름을 정리하였다. 특히 일본인들에 의한 부산지역 상권장악, 대일의존성 심화를 토대로 한 무역항으로서의 부산항 성장 과정에 주목하였다.⁴¹⁾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금융사와 관련해서는 박원표의 연구가 있다.⁴²⁾ 개항 후 1960년대까지의 부산지역 금융사의 전개를 개설하는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다루었으나 시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최근 차철욱과 김동철의 연구는 부산 금융사 연구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⁴³⁾ 이들은

38) 노기영, 「日帝末 戰時海運과 釜山港 關聯 資料紹介」 『港都釜山』 2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39) 배석만, 「朝鮮汽船株式會社의 경영자료 분석」 『港都釜山』 2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40) 박인석, 「釜山貿易考」 『港都釜山』 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63.

41) 박봉두, 「일제강점기 부산의 유통과 무역」 『港都釜山』 1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8.

42) 박원표, 「釜山 金融史」 『港都釜山』 7,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69.

43) 차철욱,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역사』 9,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1; 김동철, 「동래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역사』 9,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1; 차철욱·김동철, 「근대 부산지역 금융관련 자료와 그 성격」 『港都釜山』 1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영업보고서 등 경영관련 1차 자료의 발굴과 분석을 통해 부산지역 조선인 은행의 설립과 경영활동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복원하였다. 특히 한일합방 후 일본인들이 점차 부산경제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조선인 사업가의 자본공급을 맡았던 조선인 은행의 존립공간에 대한 규명과 그 한계를 밝히려고 했다는 면에서 연구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Ⅲ. 과제와 전망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정치사와 경제사 연구의 현황을 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것은 연구의 분발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지역학으로서 부산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하여 부산의 역사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었지만, 영역별 연구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부산의 전체적인 역사상이 구축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사, 정확하게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사에 대한 연구는 저항과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축적과 비교하여 그 불균형이 크다.

경제사 연구는 식민지 지배사 연구에 비해 연구축적이 많은 편이나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수산업, 운송업, 무역에 대한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공업화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면방직공업에 연구가 편중되었다. 일제강점기 부산은 경인지역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공업지대였기 때문에 면방직 외에도 고무, 도자기, 정미, 주조 등 공업 분야에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졌지만 이들 공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특히 주조업, 고무공업은 조선인들도 활발하게 진출하였던 분야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경쟁과 갈등 또는 타협과 종속의 복합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연구가 필요한 업종이다. 적극적인 자료발굴을 통해 새로운 연구를 기대해 본다.

이렇듯 우선적으로는 연구의 분발이 요청되지만, 한편으로 앞으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의 해결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부산이라는 지역이 전국 내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역사적으로 어떤 유사성과 차이성을 가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이미 부산학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줄곧 핵심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과제는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어야 한다.⁴⁴⁾ 이 문제는 한편으로 부산지역사 연구가 한국사적 보편성 내지 타지역사의 개별성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사의 경우 기존 연구가 적기 때문에 우선은 일제강점기 지방통치시스템의 사실 복원을 과제로 해야 할 것이다. 『釜山市史』는 일제의 지방 통치구조의 복원에 충실하였으나 市史라는 성격상 전체적인 사실복원과 시론적인 문제제기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釜山市史』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과 새로운 자료발굴을 토대로 한 발전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중앙통치 내지 타 지역 지방 통치와 비교

44) 이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학 내지 지방학으로서 부산학이 스스로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에 아직 성공하지 못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하여 구조적으로 부산이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졌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차별성 관련해서는 조직과 제도 같은 형식의 차이에 주목함과 더불어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 배경 분석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대륙침략의 교두보, 일본인의 영향력이 강한 식민도시, 朝鮮 제1의 항구도시 등 일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여된 식민지 역할이 부산의 행정을 중심으로 한 지배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경제사 연구에서도 부산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명확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부산은 일제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인 식민도시였기 때문에 경제면에서도 일본인의 주도성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했다고 하지만, 그 실태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둘째는 현재 학계 최대의 화두이기도 한 식민통치의 양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식민지 근대화논쟁’에서 보듯이 단선적이고 대립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식민성과 근대성의 이중구조를 명확히 하는 한편으로 양자의 상호관계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역사상을 그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식민지 지배사의 경우 식민통치가 만들어내는 행정, 사법, 치안 제도와 그 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 및 작동방식은 식민지를 억압하고 수탈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면과 함께 효율적인 통제와 운영을 위해 근대적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양면성을 갖는다. 앞으로는 식민성과 근대성이라는 측면 중 한 쪽을 애써 무시하거나, 양쪽을 기계적으로 병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상호 관계 속에서 식민 지배의 전체상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 영역은 식민성과 근대성의 양면성을 둘러싼 학계의

논의가 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근대화 논쟁의 한 복판에 식민지 공업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립의 수위는 오히려 높아진 느낌이다. 부산지역의 식민지 공업화 연구에서도 근대화논쟁의 대립구도는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현황을 보면, 시기적으로 앞선 연구들이 주로 식민지 공업화를 통한 부산 경제의 종속성, 불균형 발전, 유기적 연관관계 결여, 조선인 자본의 소외 내지 몰락을 강조했다면, 최근의 연구는 식민성보다는 발전과 성장이라는 근대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쟁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최소한 한 가지 합일점에는 도달한 것 같다. 일제강점기의 역사에서 식민성과 근대성의 공존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모순적 성격이 공존하면서 만들어내는 입체적 역사상이 구축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셋째는 식민지 역사의 한 부분을 구성했던 일본인의 문제이다. 특히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의 역사를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것은 비단 지역사 연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한국사 연구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부산은 일본인에 의해 개발된 도시이므로 일제강점기 부산의 역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일제강점기 부산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부산지역사의 한 특징이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역사학계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부산사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이 반영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인 사회에 주목한 홍순권의

연구와 일본인 자본가에 주목한 김동철의 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연구가 활발해 진 것에 비례하여 일제강점기 조선내 일본인 사회에 대한 한국사적 위치규정과 평가의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활발해진 연구와 그 성과를 토대로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와 관련해서 민족자본 내지 민족자본가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민족자본은 경제사 영역에서 민족주의 사관이 낳은 대표적 개념으로, 경제활동에서 독자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일본인 자본에 대항하는 조선인 자본가이자 나아가서는 자주독립을 위한 운동에도 참여하는 투사의 이미지까지 가진 계층으로 설정되었다. 부산에서는 백산 안희제가 대표적인 민족자본가로 평가되면서 집중적인 연구축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족자본의 개념은 자본에 민족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또 식민지 경제에서의 지배와 저항의 구조, 즉 일본자본에 대항하는 민족자본, 그리고 그 속에서 변절한 일부 매판자본을 제외한 대다수 민족자본의 몰락이라는 단선적 이미지는 이후 관련한 실증연구가 진행되면서 많은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경제하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했던 조선인 자본가와 일본인 자본가, 또는 조선인 자본가와 조선총독부 간의 긴장·타협·종속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하는데 민족자본 내지 조선인 자본이라는 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산은 일제의 대륙진출의 교두보로 일찍이 일본인이 진출하여 건설한 식민도시였기 때문에 일본인 자본이 경제의 주축을 구성했던 한편으로 전통적 동래상인으로 대표되는 조선인 중심의 경제도 발달했던

지역이었으므로 경제활동 속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다양한 상관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적당한 지역이다. 결국 보다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 연구방법론의 모색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근 활발한 일본인 자본가에 대한 연구가 조선인 자본가와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일제강점기 정치사, 경제사 영역에서 부산과 관련한 연구는 초기 향토사 복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선구적 연구를 제외하면 1990년대 이른바 ‘부산학’의 정립과 궤도를 같이하여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사의 경우 식민지 지배사의 관점에서 일제의 지방통치 구조를 명확히 하려고 하였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부산에 거주했던 일본인 사회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사의 경우 일제에 의한 종속과 수탈, 그리고 그 속에서 조선인 자본의 저항과 종속, 몰락의 구조를 그려내려고 하였다. 최근에는 식민지 근대화에 주목하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거시경제 연구의 토대구축을 위한 장기통계가 정비되고, 전시 군수공업 확충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정치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자본 내지 자본가에 주목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경향은 전체적으로 초기의 일제와 식민지, 지배와 저항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골간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최근에서는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재검토 및 일본인 사회 같은 대립의 협간에 주목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 연구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 역사상을 보다 다양하게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대상의 등장과 그것이 결과한 다양한 식민지 역사상에 의해서 극복해야할 과제도 보다 넓어지고 심화되었다. 지역사로서 일제강점기 부산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전국 내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떤 유사성 내지 차별성을 가졌는가라는 이전부터의 과제가 채 극복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식민지 속에 공존한 식민성과 근대성의 모순적 구조를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가, 일본인 사회에 대한 연구를 부산의 역사 속에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가 등 새로운 과제가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의 발굴과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기존 연구에 대한 보충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는 부산과 관련한 연구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질적이나 양적으로 일제강점기 釜山史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⁴⁵⁾

45) 본 회고와 전망은 각 각의 논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간의 일제강점기 부산관련 연구성과를 최대한 조사하여 전체적인 연구흐름을 짚어 보고 이를 토대로 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설정해보려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기존에 공간된 관련 연구를 빠짐없이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필자의 부주의로 누락된 연구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두며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